

정례브리핑

2020.7.17(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아들 군 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결과에서도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서 재차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역판정 전담 의사소견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됩니다. 후보자의 아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3월 17일 후보자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에는 2014년 4월에 내려진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습니다.

같은 날 병무청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작성한 검사소견서에는 '본인이 입영 원하여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를 재촬영하였으나 변화가 없어 5급으로 판정한다.'라는 판정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이어서 좋은 결과를 전제로 한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난 10일 담화에도 일종의 여지를 남겼다는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고요. 그냥 정부로서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북미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가 UN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 또 미국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제단체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탈북자단체 법인 취소 결정이 오늘 이루어지나요?

<답변> 아직 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미국 쪽에서 대북전단 관련 이슈화하는 움직임 관련인데요. 과거에도 미국 단체가 국내로 와서 국내 탈북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날리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미국 등 해외 단체가 와서 국내에서 대북전단 날리기를 시도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단체에 적용하는 그런 같은 이유로 제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미 국무부가 VOA에 답변을 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종래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인권단체들이 국내에 와서 전단을 살포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국제사회단체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입장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그 입장,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그 입장에 준해서 미국 단체들도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막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그런 입장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북한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국회회담 제의 의사가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답변> 일단 남북의회가 협의에 따라 국회회담이 추진될 경우에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과거 2018년에 국회 측 요청에 따라서 우리 측이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전달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북측이 실무회담 개최는 동의하나 회담 일자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통보해 온 바 있고 그 이후 뚜렷한 다른 더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말하신 국회회담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경로로든 북한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아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질문> 통일부 등록단체에 대한 사무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이달 말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다양한 자료 보면서 계획 중인 단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시기를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